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 발의 절차와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증제 추진은 중단 되어야 한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증제 추진 경과

- 2016. 5. 21 '경기도 마을공동체 리더 자격인증제' 도입 추진에 대한 언론 보도
- 2016. 6. 20 경기도의회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입법 예고
- 2016. 6. 28 경기마을넷은 이재준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과 면담을 통해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전달
- 2016. 7. 1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와 의결 보류
- 2016. 9. 28 「따북공동체 자격증 필요 한가」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2017. 7. 1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 마을 활동가들의 우려와 여러 문제 제기로 인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경기마을넷은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과 면담 이후 상임위원회에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와 연명하여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보류된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수정/보완 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상임위원회(7.13) 의안으로 상정 되었다. 경기도의회(대표발의 이재준 의원)는 이미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보류된 조례(안)를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재상정 하는 독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은 입법예고 기간 개진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발제 하였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여러 우려로 조례(안)을 보류 하였다.

또 같은 해 9월 28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도와 조례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몇 번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 발의와 정책 추진은 그 영역의 생태계에 매우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증제 추진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자격증 제도로 만들어진 마을 활동가는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뿐더러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마을활동은 법으로 규정하거나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람의 문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마음을 얻지 않으면 활동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자리와 자격증으로 접근하면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 없이 (직업적)마을 만들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겨날 것이고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마을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삶의 터전이 마구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피해당사자는 소박한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삶을 꿈꾸는 경기도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어떻게 전문가를 골라내고 심사할 것인가?

수많은 마을이 저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데 어떤 전문가가 어떤 마을에 적합하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격증을 습득한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기존 활동가중 어떤 사람은 자격을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인가?

마을에서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인정받은 기존 활동가들은 어떤 시험을 보고 주민이 아닌 외부의 누가 자격을 부여하면 복되고 따뜻한 마을이 된다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사야하는 일을 어떤 시험으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 마을에서 오랜 기간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고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활동가가 되고 그 활동

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자연스러운 운동의 흐름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의 한 맥인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뻔한 결과가 예측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성급히 시행하면 실패 할 수밖에 없다.

이미 부산의 1004프로젝트는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고, 활동가 인증제 자체가 초기 도시재생영역에서 관련 전문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발되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영역에서의 추진은 그 실효성과 적합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토론회에서도 위험성이 많은 정책으로 규정하고 논의되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어느 시.도에서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은 반대의 의견으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정책을 이리 성급하게 경기도가 시행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마을공동체네트워크, 부천다시시작하는마을만들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경기도YMCA협의회를 비롯한 경기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매우 깊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을활동가는 조력자다. 자격증을 가지고 주민을 이끌기보다는 주민스스로 마을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을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토대로 주민과 함께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마을에 녹아져야 한다. 강조하건데 자격을 제도화 하는 순간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활동가 인증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마을만들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 고양마을공동체네트워크 | 성남마을공동체네트워크(준)
부천다시시작하는마을만들기네트워크 |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 (사)더좋은공동체
수원마을만들기시민연구모임 대동계 | 수원KYC | 안산감골주민회 | 마을숲 협동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도YMCA협의회 | YWCA경기지부협의회
안양시민단체연합 | 안양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